

여야 '민생 법안 10여건' 28일 본회의서 처리

구하라법·전세사기특별법 등
간호법, 이견 여전해 '불투명'
'채상병법'은 양자 회담 의제
민주 '25만원' 등 재표결 검토

'구하라법(민법 개정안)'과 '전세 사기 특별법' 등 10여건의 민생 법안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될 전망이다.

이들 법안이 통과된다면 지난 5월 30일 제22대 국회 개원 후 여야가 민생 법안을 합의 처리한 첫 사례가 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28일 본회의에서 10여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하고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합의 처리 법안은 △전세사기특별법 △범죄 피해자 보호법(구하라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도시가스사업법 △산업 집적 활성화법 △공공주택 특별법 등이다.

가수 고(故) 구하라씨 이름을 딴 구하라법은 자녀 사망 시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이다.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채 상병 특검법 문제로 여야가 대치하면서 임기 종료로 폐기됐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회부돼 있다.

전세 사기 특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피해 세입자에게 주택을 장기 공공 임대하거나 경매차익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피해자들이 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기본 10년 동안 거주하고, 더 거주하기를 원할 경우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보증금의 한도는 여야 합의 끝에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했다.

여기에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자체적으

로 2억원의 금액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어 최대 7억원 구간 세입자까지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

지난 21일 국토교통위 의결을 마치고 법사위로 넘겨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은 지난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술 자료를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로 인해 중소기업이 피해를 당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때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취약 계층이 도시가스 요금 감면 서비스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산업단지 건물 지붕에 신재생 에너지 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산업집적 활성화법'도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일몰을 앞둔거나 제도 시행 유예 기간에 다다른 공공주택 특별법과 택시운송사

업 발전법, 예금자보호법도 기간 연장에 합의했다.

국민의힘이 당론 발의한 '저출생 대응' 법안 중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근로기준법 등도 본회의서 처리 가능성이 높다.

일·가정 양립 지원법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난임치료 휴가 기간을 현행 연간 3일에서 6일로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정부 지원을 제한하는 게 골자다.

다만 간호법은 8월 국회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PA(진료지원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법안으로 진료 범위 등을 놓고 여야간 이견이 남아 있는 상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을 '계속심사'하기로 했고, 26일 추가 회의를 열지 논의

중이다.

여야는 그간 법안 단독 처리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되풀이하며 '민생 외면 국회'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재외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6개 쟁점 법안의 재표결이 추진될 가능성이 커 정국이 다시 경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른바 방송4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 등 6개 법안의 재표결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민생지원법 하나만 올리는 안, 6개 다 올리는 안 등 여러 가지를 놓고 논의하고 있다"며 "본회의 전까지 변동사항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한동훈·이재명 대표 양자 회담의 핵심 의제인 만큼, 28일 본회의에는 상정하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이재명, '尹 정부 독도지우기 진상조사단 구성' 지시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윤석열 정부의 독도지우기' 진상 조사에 즉각 착수한다"고 밝혔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표는 오늘,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인 독도 지우기 행태에 대해 당내에 진상 조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특히 윤석열 정권이 정부 부처 전 영역에서 체계적으로 독도 지우기에 나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실태 파악이 시급하다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정부가 독도를 지우고 있다는 근거로, 최근 서울 지하철역사 및 전 쟁기념관에 있던 독도 조형물 철거, 독도 방어훈련 실종, 군 정신교재에서의 분쟁 지역 표현, 일본해 표기 방지 등을 언급하며 "셀 수 없을 만큼 많다"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국정조사까지 염두에 둔 활동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조사단 활동을 파악해보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다"면서 "만약 (독도 지우기가) 사실이라면 제 1야당이 해야 하는 의무를 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김선욱 기자



국회의장-대한상의 '사회적 대화 간담회'

우원식 국회의장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지난 2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사회적 대화를 위한 국회의원-대한상의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

문금주 "지방공기업도 신재생에너지사업 참여"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사진)은 25일 전남개발공사 등 지방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공기업법은 지방공기업의 사업 범위에 신재생에너지사업이 명시돼 있지 않아 지방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

개정안은 지방공기업법의 적용 범위에 신재생에너지사업을 명시해 지방공기업

이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도록 했다.

문 의원은 "기후위기와 지방소멸 문제는 대한민국이 당면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며 "제도권 정치가 지방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사업 참여 확대를 지원해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지방공기업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이귀순 시의원 '지속가능 문화도시 조성' 정책토론회

광주시의회는 이귀순(사진) 의원이 지난 23일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5대 문화권 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2030 포럼과 함께 한 이번 정책토론회는 이귀순 의원이 좌장을 맡고, 정성구 대표(UCL도시문화연구소), 김광욱 실장(광주연구원 포용도시연구실)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에는 오은영 대표(포럼 문화와 도시), 김형미 의원(서구의회), 윤영일 의원(광산구의회), 신신하 정책관(광주광역시 문화정책관)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정성구 대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에 대한 비판만을 할 것이 아니라 그간 미추진된 문화권 사업의 검토 및 원만한 추진을 도모해야 한다"며 "5대 문화권간 사업추진의 균형 도모를 위한 로드맵을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창의

융합 문화도시 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은영 대표는 "문화도시의 지속가능성은 사람, 공간, 사업이 사이클을 이루는 생태계 구축이 관건이다"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만족하고 행복하고 자부심을 느낄 때 전 국민 아시아인 세계인이 찾아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귀순 의원은 "5대 문화권 조성에 집중해 시민 모두가 체감하고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 광주를 만들어 가야 한다"며 "토론회를 통해 시민 모두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라고 말할 수 있게 도시 전반의 문화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협업을 통해 다른 영역도 확장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성현 기자



민주 "한동훈, 채해병 특검법 26일까지 가져오라"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박찬대 원내대표가 제시한 '한동훈표 채 해병 특검법' 제안 시한이 내일"이라며 "내일까지 '채 해병 특검법'을 가져오라"고 압박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 대표를 향해 "법안 발의에 필요한 10명의 동지도 당내에서 확보하지 못한 게 아니라면 서두르라"며 "반바지 사장, 허수아비 대표가 아니라면 '한동훈표 채 해병 특검법'을 오늘이라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그렇게 오랫동안 약속해 온 본인의 1호 공약인 '채 해병 특검법'조차 내지 못하니 여론 지지자들까지도 답답해 한다"며 "생방송이니 뭐니 하루짜리 눈물리용 이수만 내놓으니 '국민 눈높이'에도 한참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내일까지 한 대표가 특검법안을 발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선 "한편으로는 한동훈 대표의 대표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일단 내일은 기다려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 대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 직후 대법원장 등 제3자가 추천하는 채해병 특검법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민주당은 26일을 '제3자 추천안' 발의 기한으로 제시하는 동시에, 한 대표가 추가로 제시한 '제보공작 의혹'도 특검 수사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서울=김선욱 기자

尹, 이번주나 내달 초 국정 개혁과제 설명

연금·교육·노동·의료 등 4대 분야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주 국정브리핑을 열어 국정 주요 개혁 과제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2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국정브리핑을 통해 주요 개혁과제를 설명하기 위한 준비를 해왔다.

국정브리핑에서는 연금·교육·노동·의료 등 4대 분야 개혁 추진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 저출생 문제 대응 구상을 중점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연금개혁은 젊은 세대가 더 내고 덜 받게 되는 현행 국민연금의 '세대 간 형평'을 맞추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브리핑에서는 구조개혁의 방향성 설명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세대 간 형평을 맞추기 위해 연령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률에 차등을 두는 구상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연령대에 따라 연간 인상 비율을 달리 하는 것이다. 인구구조 변화나 경제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안정화 장치도 이번에 발표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2055년으로 예상되는 기금 고갈 시점을 약 30년 정도 늦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출생 극복 방안의 하나로 둘째 자녀부터 인정해 주던 출산 크레딧을 첫째 자녀부터 인정해 주는 방안도 연금 개혁안에 담길 전망이다.

노동개혁 관련해서는 노동시장 이중구

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불법적인 파업에 대한 정부의 엄정 대응 방침 등이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간 유연화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도 주목된다.

교육개혁과 관련해서는 늘봄학교 등 추진해 온 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내년 도입을 추진하는 인공지능(AI) 교과서 등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개혁과 관련해 정부는 상급 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으로 구조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공의 복귀 규모가 크지 않을 경우, 전문의 중심 병원 구조 전환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이와 관련한 구체화된 방안이 언급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대응수석을 임명하면서 저출생 문제 대응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인구전략기획부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정치권에 협조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낼지도 주목된다. 서울=김선욱 기자